



2021. 9. 30

국회미래연구원 | Futures Brief | 3호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Futures Brief

2021. 9. 30

Vol. 3

ISSN	2799-3531
발행일	2021년 9월 30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Futures Brief」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이상직

요약

1. 경제성장이라는 자명한, 그러나 모호한 말
2. GDP라는 숫자
 - 1) GDP와 경제성장
 - 2) GDP가 측정하는 것
 - 3) GDP의 문제
3. 대안을 찾아서
 - 1) 전환의 배경
 - 2) 해외의 흐름
 - 3) 국내의 흐름
4. 그것은 과연 대안인가?
 - 1) 대안 모색 흐름의 한계
 - 2) 경제성장이라는 신앙
 - 3) 현대 화폐 시스템의 모순
5. 얼마나 더 성장하면 될까?

참고문헌

부록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자명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GDP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GDP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국내외의 여러 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을 강제하는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조건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이 세 가지 작업으로 이 글은 왜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에 대해 막연한 불편감을 느끼는지에, 그러면서도 왜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절대 가치를 유지하는지에 답한다.

세 가지 작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은 GDP라는 숫자가 1930년대에 개발되면서 구체화되었다. GDP는 대공황과 전시 상황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후 전세계의 정치경제 체계를 규정하는 핵심 잣대로 자리잡았다. GDP는 화폐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만 계산에 포함한다. 계산방식에서도 무수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GDP와 삶의 질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둘째, 1970년대부터 대안 지표를 탐색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으나 경제성장이라는 전제 자체는 유지되었다. 대안 탐색의 흐름은 ‘GDP+’와 ‘Beyond GDP’로 나뉜다. ‘GDP+’ 방식은 GDP 계산에 포함하는 항목과 계산의 방식을 나름의 가치관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시도이고, ‘Beyond GDP’ 방식은 사회발전의 여러 측면을 측정하는 종합 지표 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다. 이런 시도들은 GDP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데에, 다른 식으로 (사회)발전을 상상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 작업은 여러 지표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데에 그치거나 GDP의 한계로 지적되는 공리주의적 세계관을 확장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이들 작업은 성장 자체를, 성장 강요의 메커니즘을 문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우리가 경제성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일정 부분 많은 사람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막연하기 믿기 때문이고, 일정 부분 현대 화폐 시스템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민간은행이 부채 형태로 통화를 공급하는 경제시스템은 통화량의 무한한 확대 공급을 요구한다. 화폐량 증가는 곧 부채 규모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자본 수익을, 다수의 대중에게는 인플레이션 비용 부담을 안긴다. 경제성장 중단은 연쇄적인 부채 미상환을 초래해 대규모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무한히 부채를 늘릴 수는 없다. 오늘날 사회는 계속 달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성장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위의 검토로 이 글은 세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우리는 GDP의 의미를, 경제성장의 의미를 좀 더 따져 물어야 한다. 둘째, 대안 지표 작업의 목표를 여러 가치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쪽으로 더욱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셋째, 근본적으로는 현대 화폐 시스템을 전환할, 성장의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은 근본적인 사고 전환을, 전면적인 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무한일 수는 없는 진보적 움직임을 고찰하면서, 단순히 움직임의 법칙을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정신이 만족하기 어렵다.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추가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의 진보에 의해서 사회가 흘러 들어가는 궁극적 지점은 무엇인가? 진보가 멈추면 인류가 어떤 조건에 놓이게 될까?

(…)

단순히 대지로 하여금 더 많은 인구, 그렇지만 반드시 더 낮거나 더 행복하지는 않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부와 인구의 무한한 증가를 위해서 대지에서 뿌리를 뽑혀야 하는 것들 덕분에 가능한 기쁨 가운데 커다란 분량을 상실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후손들은 어차피 필연성에 의해 그럴 수밖에 없이 강제되기 훨씬 전에 정지상태에 만족하게 되기를 나는 후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바란다.”

- 존 스튜어트 밀(2010[1848]: 89, 95)

“인류세의 시대에 가장 긴급한 일은 못 생명의 터전인 땅(자연)을 보살피고 이웃과 더불어 후세대를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성에 대한 오래된 정의(定義)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다.”

- 김정현(2021: 3)

1. 경제성장이라는 자명한, 그러나 모호한 말

이 글의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경제가 성장했는데 왜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할까? 둘째, 그러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에도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신념은 왜 여전히 공고할까?

우리에게 경제성장은 자명한 말이다. 경제성장을 주장하지 않는 정치인이 없고, 경제성장을 말하지 않는 언론이 없다.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을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성장은 절대 가치다. 2021년 9월 14일자 「동아일보」 사설(“잠재성장률 급락에 경제 비상, 대선후보들 관심이나 있나”)은 한국사회에서 ‘경제성장’이라는 말의 용법을 보여준다.¹⁾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 2000년대 초

1)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913/109239247/1>

5%대, 2010년대 초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제 1%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 이미 경제가 성숙할 대로 성숙한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 문턱을 간신히 넘었고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바닥권인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경제 체질을 확 뜯어고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저성장이 고질화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가뜰이나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세금 수입은 줄어든 것이다. (...) 여야 후보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공약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표를 얻는 데 유리한 복지공약만 무더기로 쏟아내는 실정이다. (...) 파격적 규제 완화로 기업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누가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할 공약을 제시하는지, 당장 현금을 쥐여주지만 미래엔 도움이 안 되는 약속을 하는 건 누군지 국민이 더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이 사실에서 GDP 증가율로 치환되는 경제성장은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다. 사실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사라지고 늘어난 세금으로 복지도 더 할 수 있다.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할” 방법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경제성장이라는 말을 조금 어색한 맥락에서 쓸 때도 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았습시다’라는 식의 말이나, ‘경제는 성장했지만 자살율은 늘었습니다’라는 식의 말이 한 예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니만큼 뭔가 안 좋은 것과 연결될 때는 어색하게 쓰인다. 경제성장은 좋은 것인데, 중간에 어떤 고리가 없어서 경제성장의 좋은 점이 잘 발현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은, 경제성장과 자살율은 역접 관계일까? 경제성장은 여러 사회조사에서도 등장한다. 여기에서 경제성장은 보통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와는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시된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를, 경제성장과 환경적 가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진지한 논의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주류는 경제성장이 답이라고 말한다. 조금 더 나간 논의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성장하면 된다고 말한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는 손쉽게 봉합되고, 통합되고, 융합된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우리가 경제성장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 도대체 경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제성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가 아는 것은 경제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앞의 칼럼과 같이 GDP라는 숫자가 커져야 한다는, 클수록 좋다는 정도가 아닐까.

이 글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자명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GDP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GDP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국내외의 여러 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을 강제하는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그 조건을 바꾸는 데에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이 세 가지 작업으로 이 글은 왜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에 대해 막연한 불편감을 느끼는지, 그러면서도 왜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을 거부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답해보고자 한다.

2. GDP라는 숫자

1) GDP와 경제성장

오늘날 우리가 잘 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제’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GDP(Gross Domestic Product)라는 숫자와 함께 태어났다. ‘성장’ 개념도 만들어진 ‘경제’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20세기 초반 해도, 즉 GDP²⁾가 만들어지기 전만 해도, 경제학과 경제정책에서 경제는 ‘성장’보다는 ‘균형’이라는 말과 가까웠다(홍기빈, 2021: 18). 홍기빈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예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정상상태’³⁾ 개념을 소개한다. 밀은 성장이 멈춘 상태를 이상적인 목표로 봤다는 것이다. 밀(2010[1848])은 1848년에 출간한 『정치경제학원리』에서 “많은 저자들이 부와 인구의 정지상태를 두려워하고 찾아오지 않기를 빈다”(89쪽), “그러나 정지상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92쪽)라고 절 제목을 붙이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정지상태가 우리의 현재 상황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향상된 상태일 것이라고 믿는 편이다. 인간의 정상적 상태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존하는 사회생활의 양태에서 나타나듯이 서로 상대방의 탄죽을 걸고 짓밟으며 팔꿈치로 쥐어박고 방해하는 것이 산업의 진보가 진행되는 한 단계에서 생긴 불쾌한 증상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바람직한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삶의 이상에는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92쪽)

홍기빈은 19세기에도 부국강병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밀한 수치로

2) 1934년 당시 발표된 것은 GNP였다. GDP로 변경된 것은 1991년이다. 이 글에서는, 의미 차이가 중요한 맥락을 제외하고는, 둘을 혼용해서 쓴다. 둘의 의미 차이는 11쪽을 참조.

3) 홍기빈은 “stationary state”를 ‘정상상태’로 옮겼으나 『정치경제학원리』의 역자 박동천은 같은 말을 ‘정지상태’로 옮겼다.

계산되는 바의 GDP 성장이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홍기빈, 2021: 18)고 지적한다. 19세기에 경제는 일상어로는 “비용 절감”(필링, 2019[2018]: 19)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GDP는 193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코일, 2018[2014]: 26-39). 영국에서는 콜린 클라크(Colin Clark)의 주도로 1930년에 설립된 국가경제자문위원회에서 국민소득과 지출을 추계했다. 전대미문의 경제 침체를 종식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통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루스벨트 정부가 불황에 빠진 경제 상태를 파악하고자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에 국민소득 추계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작업을 주도한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미국 국민소득이 1929-1932년에 절반 줄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934년 1월에 의회에 제출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소득 추계값을 확보하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 운용 폭을 대폭 넓혔다(코일, 2018[2014]: 27).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GDP의 효용은 거의 절대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군비가 계정에 포함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 군비는 비생산적 지출로 간주되어 국민소득 계정에서 빠졌다. 그러나 곧 포함되었다. GNP의 성격을 두고 쿠즈네츠와 상무부가 논쟁했지만 GNP 측정 목적은 (후생 측정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는 상무부의 의견이 채택되었다(코일, 2018[2014]: 29).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가 1940년에 출판한 팸플릿 “전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도 같은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국민소득 측정에서 정부 지출을 포함하기로 한 결정의 의미를 코일(2018[2014])은 이렇게 평가한다.

“이로써 GNP(나중의 GDP)는 근대산업이 태동한 18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경제를 생각하던 방식과는 현격히 다른 개념이 되었다. 두 세기 동안 ‘경제’는 민간 부문이었다. 정부가 경제생활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작았다. 정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이유는 주로 전비 조달을 위한 세금 부과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 세기가 흐르면서 정부 역할은 꾸준히 확장되었다. (...) 전시를 살았던 경제학자들이 현대적인 GDP 개념을 개발했을 때, 정부는 이미 전보다 훨씬 커다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정부 역할이 커진 상태에서 낡은 국민소득 개념으로부터 국방비 지출을 차감하면, 전쟁 준비가 민간 소비를 엄청나게 희생시킨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게 된다. 전쟁을 하려고 세금을 거두는 군주와 서비스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려고 시민의 소득을 한 데 모으는 민주 정부는 당연히 천양지차로 다르다.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가는 민주적 이행의 한 측면은 정부를 국민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할 대상으로 상정하는 관점의 전환이었다.” (31-32쪽)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던 민간 영역에서 정부라는 ‘보이는 손’이 성장시켜야 할 어떤 총체적인 영역으로 재규정되었다. 케인즈의 1940년 글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영국 재무부 관료 오스틴 로빈슨(Austin Robinson)은 리처드 스톤(Richard Stone)과 제임스 미드(James Meade)에게 세계 최초로 현대 국민계정과 GDP를 개발하도록 했다. 이 작업의 결과는 1941년 영국 정부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었다. 미국 최초의 GNP 통계는 1942년에 발표되었다.

1950년대 초반이 되자 GNP는 서구 세계 전체에서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지배적 잣대가 되었다(피오라몬티, 2016[2013]: 46). 1946년 5월에 영국과 미국의 통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위원회가 결성되어 나라별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연합(UN) 차원의 권고 사항을 작성했다. 물자 공급이 부족했던 전후에 자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1947년 7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유럽 원조를 집행하는 기구로 1948년 4월에 창설된, 1961년부터 9월부터는 OECD로 바뀐,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역할도 16개 회원국의 국민계정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는 일이었다(코일, 2018[2014]: 68). UN은 국민계정의 국제적 측정 표준을 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 표준이 오늘날의 국민계정체계(Systems of National Accounts, SNA)다(코일, 2018[2014]: 33-34). UN 통계위원회가 관리하는 UN 국민계정체계의 첫 판본은 1953년에 발표되었다(피오라몬티, 2016[2013]: 133).

개도국과 사회주의권 국가 대다수는 이 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도국은 화폐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데에다 측정 역량이 부족했다.⁴⁾ 사회주의권 국가는 다른 잣대를 개발했다. 그것은 물질적 생산만을 고려(gross social product)했고, 그것에서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지출을 제외한 물적순생산(net material product)을 측정했다(피오라몬티, 2016[2013]: 48).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는 제외되었다.

소련이 기존의 방법론을 포기하고 공식 GNP를 발표한 것은 1988년이다(피오라몬티, 2016[2013]: 54). 곧 이은 냉전 종식은 변곡점이었다. 이를 계기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에 걸쳐 UN SNA는 상당히 수정되었고 1993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 유럽 대륙에서도 GDP는 최상의 권위를 가진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에 초석을 놓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채택과 정부의 공공복지 유지 역량을 GDP 성과에 결부시킨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발표가 결정적인 계기였다(피오라몬티, 2016[2013]: 56). G8나 G20와 같은 국제 클럽의 회원국 기준도 GDP에 따라 세워졌다. ‘신흥 시장’이나 ‘신흥 세력’ 등을 정의하는 기준도 GDP가 되었다.

4)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1958년에 유엔의 1953년판 국민계정체계 기준에 따라 GNP를 작성해 발표했다. 1968년부터는 분기별로 작성·발표한다(한국은행, 2020).

GDP는 지구를 ‘선진’과 ‘개발도상’의 두 세계로 나누는 데에도 기여했다. 1949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제시된 “저발전(된)” 개념도 GDP로 측정되는 경제를 정부가, 특히 선진국 정부가 성장시킨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었다(에스테바, 2010[1992]; 러미스, 2002[2000]). (저)발전이라는 말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리스트(2013[2007]: 124-126)는 이렇게 부연한다.

“그때까지의 남반구-북반구 관계는 대체로 식민/피식민의 대립 관계와 일치했다. (...) 식민지와 식민지배국은 상반되는 두 세계에 속했으므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족해방투쟁의 형태로 드러나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저발전’과 ‘발전’은 같은 식구였다. 하나가 다른 것보다 조금 뒤쳐질 수는 있지만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 ‘저발전’은 ‘발전’의 반대가 아니라 발전의 불완전한 형태이거나 ‘유아적’ 형태였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 이 비교에서 국가는 개별적인 존재였다. (...) 세계는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의지하는 하나의 체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 동등한 ‘개별’ 국가들의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누구나 여기서 기회균등과 ‘자수성가’의 이데올로기를 찾아볼 수 있다.”

모든 나라는 GDP라는 잣대로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발전은 “경제가 덜 발전된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일인당 소득의 증가”(에스테바, 2010[1992]: 48)로 규정되었다. 각국은 GDP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국제 정치의 장에서 지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 GDP 실적이 좋지 않은 나라는 세계은행과 IMF가 국제 투자자와 손잡고 강제하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GDP 체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여러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GDP 추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피오라몬티, 2016[2013]: 60). 금융 거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계산방식에 대한 비판도 불거졌다(필링, 2019[2018]: 95-104).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도 커졌다(스티글리츠, 2011[2010]). 이런 분위기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몇몇 국가로 하여금 대안 지표체계를 탐색하게 했다. 그 내용은 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2) GDP가 측정하는 것

GDP는 나라 경제를 기록하는 전체 회계 장부인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핵심 통계치 다섯 개⁵⁾ 중 하나인 국민소득통계를 요약한 숫자다. GDP는 화폐로 계산된 부의 총량을 뜻한다. 한국은행은 GDP를 “일정 기간에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5)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가 그것이다(한국은행, 2020: 3-4).

시장가치 합”으로 정의한다(한국은행, 2020). ‘일정 기간’은 기본이 1년이다. GDP에서는 지역이 중요하지 주체(내국인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⁶⁾

GDP는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생산 접근법과 소득 접근법, 지출 접근법이다(필링, 2019[2018]: 60-64; 한국은행, 2020: 79-81). 생산 접근법은 무엇이 만들어졌는지를, 소득 접근법은 얼마나 벌었는지를, 지출 접근법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측정한다. 생산 접근법으로 우리는 1년간 이루어진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활동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소득 접근법으로는 그 부가가치가 각 경제주체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지출 접근법으로는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를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주체가 어떻게 소비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한 국가 경제에서는 소비한 만큼 생산할 수 있고, 돈을 번 만큼 쓸 수 있다. 따라서 세 방법으로 측정한 값은 이론적으로 서로 같아야 한다.

생산 접근법에서 GDP는 농장, 공장, 상점 등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을 합한 것이다. 계산의 관건은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일이다. 빵집에서 파는 빵의 가격을 모두 더하는 것으로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 밀가루 가치와 밀의 가치는 이미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 즉 빵이라는 ‘최종제품’의 가치를 측정하려면 빵의 가격에서 모든 중간재의 가치를 빼야 한다. 논리적으로는 주어진 기간에 생산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 가치에서 중간재 가치를 뺀 값이 GDP가 된다.

지출 접근법에서 GDP는 가구나 기업, 정부가 ‘소비’한 모든 것의 가치를 더한 값이다. 여기에서 수출품은 더하고 수입품은 뺀다. 민간 지출은 개인과 가계가 소비용 재화나 서비스에 쓴 돈을 뜻한다. 정부 지출은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쓴 돈으로, 크게 집합 서비스(국방, 공공행정, 법률 시행 등)를 공급하기 위해 쓰는 돈과 개별 서비스(의료, 보건, 교육 등)를 공급하기 위해 쓰는 돈으로 구분된다. 복지 및 연금 급여와 같은 이전 지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 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돈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전 지급은 복지 및 연금 수혜자의 소비 지출로 집계된다. 기업 지출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위해 공장과 설비 등을 갖추는 데 쓴 돈을 뜻한다.

소득 접근법에서 GDP는 노동자에게 준 임금, 사업 이익, 주주에게 준 배당금, 임대료, 세금 등 한 경제 안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더한 값이다(한국은행, 2020: 79).

한국은행이 제시한 2018년 한국의 국민계정통계를 예로 들어보자(2020: 27-

6) GDP가 쓰이기 전에는 GNP가 쓰였다. GNP는 한 국가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필링에 따르면, 미국 조지 H.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자신의 경제적 업적을 커 보이게 하려고 GNP를 GDP로 바꾸면서 GDP가 통용되기 시작했다(2019[2018]: 125-126). 피오라몬티는 1991년의 변경이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알리는 것”이었다면서 그 의미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한다(2016[2013]: 55-56). 피오라몬티에 따르면 GDP로의 변경은 여러 개도국의 경제 활황에 영향을 받은 결정이었다(55쪽). 정치적으로는 “북반구 나라들이 남반구의 자원을 손쉽게 갈취하고는, 이를 남반구의 이익이라 지칭한다는 사실”(56쪽)을 감추는 효과가 있었다. 즉 다국적기업의 부를 북반구의 것이 아닌 남반구의 것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31).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국민 자산은 29,271.1조원으로, 비금융 자산(재고, 건물, 구축물, 기계 및 토지)이 14,033.6조원이고, 금융 자산(현금 및 예금, 채권·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대출금, 보험 및 연금, 기타)이 15,237.5조원이다. 이를 토대로 각 경제주체가 2018년 한 해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4,369.3조원이다. 여기서 중간재 가치 2,471.1조원을 뺀 1,898.2조원이 총 부가가치가 된다. 이 값이 바로 2018년의 국내총생산(GDP)이다.

이 금액에 한국의 경제주체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40.7조원)에서 국내 생산자가 외국에 지급한 소득(33.1조원)을 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면 국민총소득(GNI)이 된다. 국민총소득(1,905.8조)을 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계(877.4조원)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34.1조원), 정부(304.7조원)가 소비지출로 1,216.3조원을, 기업 및 정부가 국내투자(597.7조원) 및 해외투자(91.9조원)로 689.6조원을 사용했다.

단순 합산액이 최종 GDP 값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절에 따른 변동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수치를 보정한다. 보정된 값은 통상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 “국가의 경제력과 국민의 생활 수준”(한국은행, 2020: 209)을 비교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세계 10위를, 1인당 GNI에서 인구 2천만 명 이상 57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한국은행, 2020: 209)

이렇게 정리하면 GDP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방식으로 도출된 객관적이고 명료한 숫자로 보인다. 그러나 GDP는 상당 수준의 자의적 판단과 추정에 따라 도출된 매우 모호한 숫자다(코일, 2018[2014]: 51-61). 전 세계 국가 다수는 계산의 주요 수치를 표본 조사 결과로 도출한다. 최근에는 행정 자료도 활용되지만 설문조사 비중이 여전히 크다. 설문조사는 여러 이유로 제대로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 성격과 규모가 다른 조사 자료를 결합하는 일도 단순하지 않다. UN이 틀을 제시하지만 계산에 어떤 것을 넣고 뺄지의 기준, 즉 “생산의 경계”(코일, 2018[2014]: 157)도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에서는 총기 판매가 GDP에 포함된다. 대다수 국가에서 총기 판매는 불법이고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약 거래나 성매매도 포함하는 나라가 있고 포함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더 어려운 것은 가사노동이나 정부 지출과 같이 시장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활동을 측정하는 일이다. 민간 지출 측정에서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제품보다 측정하기 어려운 서비스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필링, 2019[2018]: 71). 금융서비스를 측정하는 문제는,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GDP 계산에서 핵심 논쟁 지점이 되었다(코일, 2018[2014]: 147-156).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계산법에 따라 보정 값이 상당히 달라진다(코일, 2018[2014]: 51). ‘시장화’ 수준이 각기 다른 국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환율로 가격을 표준화하는 방식은 복잡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피오라몬티, 2016[2013]: 69). GDP에는 이 모든 애매한 것들에 대한 나름의 판단과 계산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에 유엔의 기준도 꾸준히 바뀌어 왔다. GDP 계산의 복잡성은, 그리스 사례(코일, 2018[2014]: 5-9)와 같이,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3) GDP의 문제

GDP 계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이 글에서 상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GDP라는 숫자의 핵심 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GDP는 돈이 오가는 거래만 포함한다. 돈이 오가는 거래면 무엇이든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격, 또는 문제는 GDP를 고안한 쿠즈네츠가, 후세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가 명료하게 말한 바 있다.

첫 국민소득계정 통계를 의회에 보고한 1937년에 쿠즈네츠는 이렇게 썼다.

“국민소득을 추계할 때 부의 획득과 소유를 탐하는 사회의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계몽된 사회철학의 관점에서 설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견지에서 사회에 이로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요소를 총계에서 제거하는 국민소득 추계값을 산출하는 것은 대단히 값진 일일 것이다. 그러한 추계값에서는 현행 국민소득 총계에서 군비 지출 전부와 대부분의 광고비, 금융 및 투기 거래에 들어가는 지출의 대다수가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 경제 문명에서 암묵적 비용에 해당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느라 들어간 지출도 빠지게 될 것이다. 지하철과 비싼 주거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온갖 거액의 지출이, 그러한 지출 덕분에 시장에서 실현되는 가치의 순산출액만큼 국민소득 추계값에 보통 포함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출은 사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에게는 이로움을 더해 주는 것이기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필요악이다.” (코일, 2018[2014]: 28에서 재인용)

로버트 F. 케네디는 1968년 3월 18일에 캔사스 대학에서 진행한 대통령 예비선거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공동체의 우수성과 가치를 포기해가면서 물질적인 것의 축적을 추구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국민총생산(GNP)은 연간 8,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을 GNP로 판단할 수 있다면 여기에는 대기오염, 담배 광고,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치우는 구급차도 포함됩니다.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특수 자물쇠와 그것을 부순 사람들을 집어넣을 교도소도 포함됩니다. 미국삼나무 숲이 파괴되고, 무섭게 뾰은 울창한 자연의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이팜탄도 포함되고, 핵탄두와 도시 폭동 제압용 무장 경찰 차량도 포함됩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총생산에는 우리 시의 아름다움, 결혼의 장점, 공개 토론에 나타나는 지성, 공무원의 청렴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학이나 용기도, 우리의 지혜나 배움도, 국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나 열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빼고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GNP는 미국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어도 정작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왜 자랑스러운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클라크, 2020[2008]: 86-87)

GDP의 한계를 지적하는 주장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GDP는 후생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생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 중에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고, 후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 중에 GDP에 포함되는 것이 있다. 전자의 대표 예는 가사노동이다. 후자의 예는 미국 경제학자 프레드 허시(Hirsch, 1976)가 개념화한 ‘방어적 지출’(교통, 오염, 안정 비용)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GDP가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넓게 보면 후자의 예로 여겨질 수 있다.

물론 GDP와 후생이 전적으로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다. 기대수명이나 유아사망률처럼 후생과 분명한 관계가 있는 지표와 GDP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개발도상국’에 GDP가 의미 있는 지표로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털린(1974)으로 대표되는 여러 행복 연구가 일관되게 강조하듯이 일정 수준(대략 1인당 국민소득 1만 5천 달러) 이상에서 GDP와 후생의 관계는 매우 약하거나 없다(해밀튼, 2011[2003]: 65; 잭슨, 2013[2009]: 85).⁷⁾

둘째, 시장가치를 측정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더라도 GDP라는 숫자는 특정한 가치지향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를 제외하는 것과 같이 시장 거래라고 무조건 포함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 거래에 포함되지 않던 활동이 사회 변화에 따라 포함되기도 한다.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코일, 2018[2014]: 59-62). 궁극적으로 ‘가격’이라는 것을 왜 측정하는가의 질문으로 들어가면 ‘좋고 나쁨’이라는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GDP라는 숫자에는 가치판단이 담겨 있다.

셋째, GDP로 측정되는 경제성장 논리가 사회와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칼 폴라니(Karl Polanyi, 2009[1944])는 시장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관계의 파괴가 요구되었다고 주장했다. 프레드 허시는 『성장의 사회적 한계』(1976)에서 사회 환경이나 인간관계의 질, 집합적 협동 역량 등 복지를 위해 중요한 자원이 경제성장과 부정적 상호 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허시는 “GDP는 비시장적 재화의 파괴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소비의 감소 및 그것을 비용이 드는 소비로 대체하는 것을 통해 동력을 공급받는 내재적 성격을 지닌다”(피오라몬티, 2016[2013]: 90)고 지적했다.

GDP는 미래 역량의 고갈도 고려하지 않는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으로만 규정될 뿐 토지

7)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모두가 GDP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을 측정하는 것(코일, 2018[2014]: 136)도, “해당 사회가 얼마나 ‘시장화’되어 있는지를 측정”(피오라몬티, 2016[2013]: 72)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의 경제성장 연구가 (대중 담론에서는) GDP를 국민경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등 자원은 무한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원 제약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본과 기술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고 가정된다. 자본과 기술은 “토지와 같이 고갈될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한 거의 완벽한 대체물로 간주”된다(피오라몬티, 2016[2013]: 91). GDP는 부의 흐름에만 관심을 갖고 부의 축적량(감가상각)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필링, 2019[2018]: 222). 그 결과 GDP는 구조적으로 자원을 고갈시킨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앞의 사항을 무시했기에, GDP는 전후 정치경제 체제를 규정한 핵심 숫자이자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 틀은 오늘날에도 건재하다. GDP는 화폐로 측정되는 가치의 무한한 성장을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규정했다. 각국의 정부를, 특히 ‘선진국’의 정부를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설정했다. 정부가 GDP라는 수단으로, GDP 상승을 목적으로,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소비를 번영의 추동력으로 본 만큼 사회 자체가 그에 따라 재조직되었다. 정부는 지속적인 GDP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로 민간 소비를 진작했다. 국방 예산도 꾸준히 늘렸다. 경제정책은 모든 종류의 소비주의를 추동하기 위해 설계되었다(피오라몬티, 2016[2013]: 63). 이런 체제는 사실 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도 받아들여졌다. 자본가와 노동계급도 ‘더 많은 성장’을 목표로 타협할 수 있었다. 모든 주체가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두 범주로 자리 매겨졌다.

GDP 계측 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정보는 여러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피오라몬티, 2016[2013]: 66). GDP는 ‘케인스주의 거시경제 이론’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수단 모니터링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1940년 이래 GDP의 역사는 곧 거시경제학의 역사이기도 하다.”(코일, 2018[2014]: 36) 정치와 삶은 경제학자들의, 소수 전문가들의 협소한 계산에 따라 전망되고 조정되었다(얼·모런·퍼킨스, 2019[2000]).

3. 대안을 찾아서

1) 전환의 배경

GDP의 위치가 공고하기는 했으나 앞에서 제시한 문제에 주목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GDP에 대한,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서구 국가들에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였다. 물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1962년에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출간했다. 1966년에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은 GDP 경제를 ‘카우보이 경제’에 비유하는 논문을 발표했다(피오라몬티, 2016[2013]: 177). 1971년에는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켰다. 1972년에는 『성장의 한계』가 출간되었다. 1973년에는 독일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펴냈다. 1974년에는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행복연구’의 이정표가 될 논문을 발표했다. 1974년에는 1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해다. 1976년에는 독일 출신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이 『소유인가, 존재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해에 미국 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2021[1976])에 대해 썼다. 이러한 지적인 작업은 1960년대 후반 세계를 휩쓴 저항 운동의 영향을 배경으로 한다(히토시, 1999[1996]).

국제 수준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한 첫 회의는 197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다. 이 회의에서 UN은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했다. 회의의 최종 문서에는 ‘생태적 발전’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채택되었다(피오라몬티, 2016[2013]: 104). 이로부터 15년 뒤인 1987년에 노르웨이 수상 브룬트란트를 위원장으로 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공식 도입했다. 『우리 공동의 미래』로 이름 붙여진 브룬트란트 위원회 보고서는 1987년에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88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1950년 설립)와 UN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973년 설립)에 의해 설립되었다.

1992년에는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의 20주년을 기념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UN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가 열렸다. 여기에서 ‘리우 선언’과 리우 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 강령인 ‘의제 21’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도 체결되었다. 의제 21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조직으로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가 1993년에 설치되었다. 2000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제55차 유엔총회가 열려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의제로 채택했다. 2002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가 열리고 ‘요하네스버그 선언’이 채택되었다. 2012년에는 UN지속가능발전회의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시 열렸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제목의 선언을 채택했다. 이 회의에서 각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구로 ‘녹색경제’ 의제를 채택하고 새천년개발목표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했다. 2015년에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는 2015년에 만료된

새천년개발목표의 뒤를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선언’은 잘 ‘실행’되지 않았다. 1980-90년대를 지배한 것은, 1979년에 출범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1979~1990년)와 1981년에 출범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1981~1989년)로 상징되는, 우리가 오늘날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일련의 정치경제적 움직임이었다(헬라이너, 2010[1996]; 하비, 2007[2005]; 장석준, 2011). 한창 발전을 위해 달리고 있던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거니와 선진국의 유권자 다수도 GDP가 환경에 미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향을 고려하는 일보다는 GDP가 다시 성장궤도에 올라서게 만드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존의 발전 척도인 GDP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발전지표를 찾으려는 노력은 신자유주의의 파장을 전 세계가 어느 정도 확인한 2000년대 후반에 와서야 가시화되었다.

앞에서 개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연동해 여러 대안 지수 작업이 시도되었다. 대표 작업은 크게 두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흐름은 “‘나쁜 것들’을 빼고 추가적인 ‘좋은 것들’을 포함해 GDP를 수선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움직임들”(피오라몬티, 2016[2013]: 103)이었다. 이른바 ‘GDP+’ 논의로 통칭되는 흐름이다. 또 하나의 흐름은 GDP를 보완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움직임이다. 이른바 ‘Beyond GDP’ 논의로 통칭된다. 이 흐름에서 주된 작업은 단일한 총합 지수를 산출하기보다는 ‘종합상황판’(dashboard)을 채택해 이용 가능한 지표들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스티글리츠·센·피투시, 2011[2010]). 화폐로 측정되지 않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을 측정하는 지표를 도입하고 화폐로 측정되는 것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다음 절에서는 각 흐름을 국제와 국내로 구분해 개괄한다(이하 소개될 지표·지수 목록을 부록의 <부표 1>로 제시했다).

2) 해외의 흐름

국제적으로 GDP를 개선하고자 했던 첫 시도는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와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2년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라 불리는 지수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들은 첫째, 모든 지출을 소비, 투자, 중간재 지출로 재분류해 지출의 성격을 분명하게 구별했다. 둘째, 여가와 가사 노동의 기여도 포함했다. 셋째, 그들이 ‘도시화의 불편’이라고 부른 경제성장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보정하는 변수를 도입했다. 넷째, 군비 지출을 제외했다(코일, 172; 피오라몬티, 2016[2013]: 106). 이들의 작업 결과 전후 이래로 미국에서 MEW는 GNP보다 느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이들이 GDP를 버린 것은 아니다. 이들은 GDP를 경제 분석과 예측에 도움을 주는 정책 입안의 주요 수단으로 높이 평가했다.

MEW는 복지 상태를 좀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국민계정 항목을 재배열하고 보정한 것이었다(피오라몬티, 2016[2013]: 106).

비슷한 작업으로 로버트 아이스너(Robert Eisner)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총수입계정체계’(Total Incomes System of Accounts, TISA)를 수립했다. 아이스너는 첫째, 정부 구매 항목을 매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산출에서 제외했다. 둘째, 노동과 관련된 가계 지출도 공제했다. 셋째, 가계 부문의 비시장적 생산 가치를 포함했다(피오라몬티, 2016[2013]: 107). 아이스너의 제안은 생산과 투자는 기업이 하고 가계는 소비만 한다는 “GDP의 주술이 만들어 낸 몇 가지 ‘신화들’을 해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피오라몬티, 2016[2013]: 108)

이런 작업의 흐름에서 경제와 사회, 환경 요소를 인간 복지라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계측하려는 체계적인 시도는 1980년대 말에 있었다. 경제학자 허먼 데일리(Herman Daly)와 신학자 존 코브(John B. Cobb)는 ‘지속가능한 경제 후생 지수’(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ISEW)를 개발했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에 참진보지수(Genuine Progress Index, GPI)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2006년까지 업데이트되었다. 이들은 첫째, 경제적 후생에 시장화될 수 있는 상품의 산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향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했다. 가사노동, 현존하는 내구성 소비재, 공공 도로와 고속도로, 보건과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을 계산에 포함했다. 둘째,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 셋째, 대부분의 정부 지출, 가계의 통근 비용, 보험, 오염 통제, 교육과 보건에 대한 개인 지출은 계산에서 제외했다. 넷째,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 공해 비용을 공제했다. 다섯째, 습지와 농지가 도시화 용도로 전환되면서 생길 생산 서비스의 연간 손실분을 공제했다. 여섯째,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핵발전 연료 형태로 비재생에너지를 채굴하는 것을 제외했다(피오라몬티, 2016[2013]: 109; 해밀턴, 2011[2003]: 101-105).⁸⁾

지금까지의 노력이 ‘좋은’ 영향을 갖는 요인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려는 시도였다면 부가 어떻게 분배되고 이용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었다. 해외개발협의회(Overseas Development Council)는 1970년대 중반에 ‘물질적 삶의 질 지수’(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PQLI)를 발표했다. 유아사망률, 기대수명, 문자 해독률을 안녕의 세 지표로 선정해 결합한 것이었다. 1987년에는 인구위기위원회(Population Crisis Committee)가 ‘국제인간고통지수’(International Human Suffering Index, PQLI)를 발표했다. PQLI는 사회적 안녕을 측정하는 지표 10개를 묶어 산출한 지수로, 여기에는 인구당

8) 이 지수를 영국, 미국, 호주 등에 적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세 나라 모두에서 1950년대 이래 GPI는 GDP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증가했으며, 특히 1970년대부터는 정체하거나 감소했다(해밀턴, 2011[2003]: 105-106). 미국에서는 매릴랜드 주가 2010년에 이 지수를 채택했다(필링, 2019[2018]: 302). 이 지수체계를 한국에 적용(2006-2014년)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 이후 GDP는 계속 증가했으나 GPI는 정체되어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김경아·문태훈, 2019: 12).

칼로리 공급량, 상수도 비율, 전화 보급률,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인플레이션, GDP 등이 포함되었다(피오라몬티, 2016[2013]: 111).

1990년에 UN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도입한다. HDI는 만족성보다는 충분성을 강조하며 국민소득 확대를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자 인간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본다. 일정 수준 이하에 소득은 기본 필요에, 일정 수준 이상에서 소득은 사치재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해 1인당 GDP는 가격 보정 버전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세계 중위값 이상에서는 1인당 GDP의 증가가 인간 발전에 추가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여긴다. 여기에 건강(기대수명)과 교육(진학률)이 추가로 고려된다.

민간에서 개발한 지수로는 시민사회 연합체인 소셜워치(Social Watch)가 2000년부터 발표하는 ‘기본역량지수’(Basic Capabilities Index, BCI)가 있다(피오라몬티, 2016[2013]: 111-112). 이 지수는 지표 세 개로 구성된다. 아이들이 5학년까지 교육받는 비율, 5세까지의 생존율, 숙련된 전문 인력이 출산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다. 이 지수는 소득을 지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타 인간 역량 지표들과 매우 높은 상호 연관성을 보였으나 소득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끼리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피오라몬티, 2016[2013]: 112).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수는 런던 기반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2007년부터 110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번영 지수’(Prosperity Index)다. 번영을 부와 주관적 안녕 둘 다에 기반을 두는 차원에서 번영 지수는 사회적 자본, 개인적 자유, 기업가 정신 등과 함께 GDP도 포함한다.

환경에 초점을 맞춘 지수도 개발되었다. 매티스 웨커네이겔(Mathis Wackernagel)이 개발한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 2003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생태발자국은 인간의 안녕이나 복지 그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다. 경제가 얼마나 많은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지를 측정한다. 둘을 결합하려는 시도의 한 예는 영국에 기반을 둔 신경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 NEF)이 2006년에 개발한 ‘지구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다. 생태발자국을 생활 만족도와 기대수명으로 보완했고 소득이나 GDP는 제외했다. 이 지수는 생산된 안녕의 양을 그것이 생산되기 위해 환경에 미친 영향과 대비해 평가한다. 이 지수는 높은 수준의 자원 소비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안녕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구의 자연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의 함의 한 가지는 비슷한 수준의 안녕을 성취하는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피오라몬티, 2016[2013]: 113).

이러한 작업이 모이고, 체계화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였다. 이런 작업의 대표 사례이자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2008년에 당시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와 인도 출신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프랑스 경제학자 장-폴 피투시가 대표한 ‘경제 성과와

사회 진보 측정 위원회’는 GDP의 대안적 계측 방식을 모색했다. 2009년에 발간된 보고서(스티글리츠·센·피투시, 2011[2010])에서 위원회는 프랑스 국가통계사무소가 건강, 교육, 정치참여와 거버넌스, 사회적 연결과 관계, 환경과 불안정성 측정까지 통계 발표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단 하나의 종합 수치로 측정치를 요약하려는 유혹을 경고하면서 종합상황판 개념을 제안했다.

2009년에 유럽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GDP와 그 너머: 변화하는 세계에서 진보의 측정』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작업이다. 이들 작업은 OECD 지수 작업으로 이어졌다. 2011년에 OECD는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를 따라『하우즈 라이프』(How's Life)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서 OECD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발표했다. 이것은 10년간의 개발 끝에 발표된 것으로 주택, 환경, 보안, 소득 등 11개 주제에 걸쳐 38개국을 비교했다. 이 지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결과들 사이의 상충관계를 보여주는 도구로 주목받았다(필링, 2019[2018]: 340).

비슷한 시기에 UN은 ‘세계행복지수’를 발표했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는 2012년부터 전세계 150개국의 세계행복지수를 조사하여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간한다. 행복지수는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지역별 행복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수준(1인당 GDP), 사회적 지지, 건강수명,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등의 요인을 검토한다.

정리하면, ‘GDP+’ 작업의 맥락에서 가장 종합적인 작업은 ‘참진보지수’라고 볼 수 있고, ‘beyond GDP’ 작업의 맥락에서 가장 종합적인 작업은 ‘나은 삶 지수’와 ‘세계행복지수’라고 할 수 있다. 나은 삶 지수는 좀 더 풍부한 정보를 담는 틀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를 포함하고 행복지수는 좀 더 포괄적이면서 단순한 틀로 세계 국가 다수를 아우른다.

국가 단위에서 진행된 ‘GDP+’ 방식의 작업은 많지 않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것이 부탄이다. 16세에 왕위에 오른 국왕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는 1972년에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 개념 도입을 선언했다. 불교 가치에 기초해 통치하려면 GDP가 주도하는 경제정책과 결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피오라몬티, 2016[2013]: 115). 국민총행복지수는 ‘좋은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 ‘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 ‘환경 보전’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GNH 개념의 핵심은 ‘충족성’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조사는 일반적으로 주관적 만족도나 행복감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차원적 빈곤 측정틀에 따라 차원별로 기준선을 설정하고 기준선 이상일 경우 ‘충족되었다’고 간주한다. 일례로 소득의 충족선이 200만원이라면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 모두 200만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된다(피오라몬티, 2016[2013]: 116). 충족성 관점에서 정부는 기준선 아래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다.⁹⁾

중국 정부의 노력도, 비록 미완에 그쳤으나, 주목할 만하다. 중국 정부는 2004년에 중국 경제 실적을 측정하는 잣대로 자신이 고안한 ‘녹색GDP’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학자 니우웬유안의 주도로 진행된 이 작업에서 핵심은 경제활동에서 소비된 자연 자원과 경제 발전이 야기한 환경 손실을 화폐화해 공제하는 것이었다(필링, 2019[2018]: 197-203). 2006년에 발표된 첫 보고서는 오염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국민경제의 3.05%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색 GDP 작업은 첫 보고서 발표 직후 사장되었다. 다수의 오염 산업을 지닌 지역이 자료 수집 협조를 거부했다. 많은 지방 공무원이 낙인 찍히지 않을까 우려했다.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가통계국은 방법론과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피오라몬티, 2016[2013]: 128-131).¹⁰⁾

앞의 두 사례를 제외하면 대안지표 작업은 주로 서유럽 국가와 영미권 국가에서 시도되었다. 이들 국가는 대개 종합상황판 방식을 채택했다.

네덜란드는 1974년부터 ‘삶의 질 지수’(Life Situation Index, LSI)를 꾸준히 측정·발표하고 있다. 건강, 주거, 이동성, 휴가, 사회문화적 레저활동, (사회적) 참여/사회적 고립, 스포츠 등 8개 영역을 측정한다(변미리·민보경·박민진, 2017: 91-92).

영국은 2000년 6월에 정부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해 2011년까지 다양한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대표 결과물이 “번영을 재정의하기”(2003)와 “성장 없는 번영”(잭슨, 2013[2009])이라는 보고서다. 2010년부터는 국가 웰빙 측정 프로그램(Measuring National Well-Being, MNW)에 착수하여 2011년부터 영국 통계청(UK Statistics Authority)이 개인,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삶의 질을 10개 영역에서 1년 및 5년 단위로 측정한다(이승준 외, 2021: 10). 최근 조사는 2021년에 있었다.¹¹⁾ 2012년에는 “숲, 강, 미네랄, 바다 등과 같은 자연 자원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자연자본위원회(Natural Capital Committee)를 설립했다(필링, 2019[2018]: 238).

캐나다의 안녕 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도 대표적인 지수다. 1999년 앳킨스 자선재단(Atkinson Charitable Fund, ACF)이 경제, 보건, 사회, 환경 분야의 진전을 측정하고자 행복지수 개발에 착수하였고, 2004년에는 캐나다 국가연구개발

9) 그러나 정부가 GNH를 지표화하기로 결정한 때는 2005년이었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조사가 시행된 때는 2007년이였다. 조작화 단계에서 4개의 기둥은 9개 지표—심리적 안녕, 보건, 교육, 시간 활용, 문화적 다양성, 굿 거버넌스, 지역공동체 활력, 생태적 다양성, 생활수준—로 측정되었다. 대안지표 작업에서 부탄이 가진 상징성에 비해 실제 부탄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1인당 소득이 중하위권에 속하고, 여성의 문해율이 55%로 낮고, 평균수명이 약 70세로 하위권에 속한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필링, 2019[2018]: 296).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도 지적된다(코일, 2018[2014]: 168).

10) 한 기사는 2015년에 중국이 연구를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환경오염 경제손실 감안 ‘녹색GDP’ 연구 재개.” 연합뉴스(2015년 3월 31일자).

11)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wellbeing>

워킹그룹(pan-Canadia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ing Group)이 출범하여 CIW 모형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2005년에는 OECD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도 연구에 합류했다(김용하·윤강재·김계연, 2009: 17-18). CIW 지수 초안은 2006년에 완성되었고 그 초안으로 2010년까지 시범 조사를 시행했다.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에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물었다. CIW 지수는 생활 수준, 여가 시간 활용, 건강, 생태계 건전성, 교육, 지역사회 활력, 시민 참여 등 7개 영역의 35개 지표로 구성된다. 종합 결과 발표는 2011년에 있었다. 이어서 국가 단위 지수 결과가 2012년과 2016년에 발표되었고, 네 번째 발표가 2021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¹²⁾

호주는 ‘진보를 측정한다’(Measuring Australia’s Progress)는 이름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을 측정하는 바 있다. 호주 통계청이 발표한다. 2002년에 첫 조사(ABS, 2002)가 있었고 2010년과 2013년에도 조사되었다. 지속가능 경제와 환경을 마련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로 설계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지표를 넣고 빼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했다는 점이다. 현재 조사되고 있지는 않다.

국제기구 수준에서의 노력과 비교했을 때 일국 단위의 노력은 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2000년대 중후반에 본격화되었다. 다수는 국가사회발전의 다측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는 취지로 종합상황판식 접근법을 취했다. 이들 작업은 국가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일회성 프로젝트로 중단되는 등 지속성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것은 정부의 일관된 관심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사례와 같이 새로운 계측 체계의 도입에 따른 정치적 타격과 저항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3) 국내의 흐름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GDP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 다만, 2000년대 중반부터 ‘대안적인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앞서 개괄한 국제 수준에서의 대안 지표 탐색 작업의 흐름에 맞추어 이런저런 지표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한국사회가 성장의 이면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때는 1990년대 중반이었다.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했으나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당시 사고는 성장의 문제라기보다 저성장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1997년 12월 IMF 사태는 한국사회의 경제시스템을 재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러나 이때는 오히려 ‘경제’가 더욱 강조되면서 대안적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웠다. IMF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수습했다고

¹²⁾ <https://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about-canadian-index-wellbeing/history>

생각한 2000년대에 중반에 들어서야 한편으로는 사회적 위험이 증가한다는 인식하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IMF 위기 극복 이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제3의 길’로서의 대안 발전 전략이 모색되었다(임현진, 1998; 기든스, 2001[1998]; 한상진, 2018).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지수 작업의 형태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대표 작업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사회발전과 사회의 질’ 연구다(정진성 외, 2010; 이재열 외, 2015). 이 연구에서 ‘사회의 질’은 “각 개인들이 자신의 복지나 개인적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하에서 사회경제적·문화적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이재열, 2015: 333)한다. 이 연구는 유럽에서 진행된 사회의 질 연구(Beck et al, 2001)를 참조해 한국사회의 ‘질’을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라는 네 차원에서 검토했다(구혜란, 2015). 영역별로 세부 지표를 구축해 총 95개 지표 목록을 작성했다. 이 연구는 사회의 질에 관한 한국적 지표체계를 개발해 장기적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의 발전과 질적 전환을 위한 모델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김인수, 2015: 216).

정부차원에서 사회를 다차원으로 측정하려는 작업도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2010년에는 정부와 통계청이 협업해 e-나라지표를 만들었다. 통계청은 2009년에 ‘삶의 질 지표’ 개발 작업을 시작해 2011년에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2014년에 이를 공개했다. 삶의 질 지표는 12개 영역(물질 부문 4개: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비물질 부문 8개: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의 80개 지표로 구성되었다.¹³⁾ 이를 바탕으로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동향’과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펴내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연구는 2009-2010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으로 진행된 국가발전 지표체계 작업이다. 미래사회협동연구 총서 시리즈로 기획된 연구에서 주요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은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를 측정하고 전망하는 지표 연구를 강조하면서 세 차원의 지표를 제안했다. 지속가능 금융발전지표와 통합사회지표, 녹색성장지표(강상인 외, 2010)가 그것이다.

이 연구는 총론에서 한국사회가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양극화와 환경 문제까지 생각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전홍택 외, 2009: 2)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감안하면서도 미래에 필요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에서 제시된 국가발전 비전은 ‘더불어 풍요롭고 자유로운 한국’이다. 경제분야 비전은 ‘활기차고

¹³⁾ 2018년에 한 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11개 영역 7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튼튼한 경제’이고, 사회분야 비전은 ‘자유롭고 안전한 신뢰사회’이며, 환경분야 비전은 ‘저탄소·친환경 사회’다. 보고서는 국가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된 부문별 목표—성장 동력 구축(경제), 사회통합(사회), 국토환경개선과 기후변화대응(환경)—도 제시한다.

위 연구는 종합비전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개발을 강조했다. 뒤이은 연구에서 연구진(박명호 외, 2009)은 경제(성장동력), 사회(사회통합), 환경 부문을 측정하는 지표체계를 고안하고 이 틀로 30개국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성장동력 부문에서는 2개 영역(안정적 성장, 산업경쟁력)에서 각각 8개 지표를,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2개 영역(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관용 사회와 신뢰받는 정부)에서 각각 11개와 9개 지표를, 환경 부문에서는 1개 영역(환경)에서 6개 지표를 선정했다(박명호 외, 2009: 29). 이렇게 설정한 지표를 5개 영역 수준에서 측정하고 이를 같은 비중으로 합친 종합지수를 도출했다. 이것을 잣대로 OECD 30개국과 비교(1990-2008년)한 결과 한국은 1990년과 2007년 모두 22위로 하위권에 위치했다(43쪽).

이들 연구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최근 연구로는 국회미래연구원 이 수행한 미래지표 연구가 있다(민보경 외, 2020). 이 연구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미래 비전을 세 차원—‘스마트 성장 사회’,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한 협력 사회’—에서 설정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연구는 각각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한다(56-57쪽). 이어서 이를 방법을 측정하는 지표로 12개 영역 77개 지표의 적절성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검토했다(108-110쪽).

또 하나의 일련의 연구는 국제기구에서 설정한 지수를 국내에 도입하는 맥락에서 수행된 것들이다. 2011년에 OECD가 BLI 지수를 발표하자 그에 따른 한국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점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정해식·김성아, 2015; 황혜신·이환성, 2020). 구체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영역은 2015년에 UN이 SDG를 공표한 것을 계기로, 환경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SGDs 연구다. 2016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통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체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석호 외, 2016; 김종호 외, 2017). 이러한 연구 등을 반영해 2018년에 정부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확정했다. 2019-2020년에는 이 틀을 보완하고, 이행 전략을 탐색하고,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석호 외, 2019; 오수길 외, 2019; 이채정 외, 2020).

2010년대 중반이 되면 거의 모든 정부 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지표·지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사회통합지수(정해식 외, 2016), 성인지, 다문화 사회통합, 삶의 질, 포용 지표, 사회적 자본 지표 등이 주요 사례이다. 동시에 행복지수 등 통합 지수 작업도 간간이

진행되었다(황명진·심수진, 2007; 김미곤 외, 2017; 조병구 외, 2018; 이채정 외, 2019; 민보경 외, 2020). 행복지수 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사회조사를 설계하는 작업도 진행되었으며(이채정 외, 2019; 허종호 외, 2020), 지자체 수준에서 지수를 도출하려는 작업도 진행되었다(민보경 외, 2020). 서울과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도 있었다(이상대 외, 2014; 변미리 외, 2017).

여러 지표·지수를 종합하려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으로 8개 연구기관¹⁴⁾이 공동으로 수행한 ‘국가사회발전 지수체계 구축’ 사업이다. “국가사회발전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수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각 연구기관이 개발·관리하는 지수체계를 검토해 종합적인 지수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검토된 지수는 사회통합지수, 삶의질지수, 지속가능발전지수, 경제활력지수, 국민역량지수, 국제공헌지수다(김석호 외, 2021).

민간 영역에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는 Lab2050의 작업이다. 영역별 가치를 맥락 없이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GDP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 지표를 탐색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구교준 외, 2018; 이승주 외, 2020; 이승준 외, 2021). 이들은 비전으로 ‘자유안전성’을, 그것을 측정하는 지표로 ‘참성장지표’를 제안한다. 자유안전성은 자기실현적 행복을 이루기 위한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선순환 사이클을 이룬다. “삶의 기본적 필요에 대한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가치 실현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이러한 자유를 통해 자기실현적 행복을 경험한다.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에서 개인은 비로소 창의성과 모험을 발휘한다. 자유와 안정은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행복한 개인은 혁신을 가져오며, 혁신을 통해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안정으로 이어”(구교준 외, 2018: 13)진다.

이들 작업은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드러냈다. 새로운 비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존재에 주목(박성원, 2021)하면서, 국가의 역할도 단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을 동원하는 것에서 각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구교준 외, 2018; 김현곤, 202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 작업은 한국사회의 관성을 드러낸다. 여전히 방점은 ‘성장’과 ‘발전’에 찍혀 있기 때문이다.

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4. 그것은 과연 대안인가?

1) 대안 모색 흐름의 한계

1970년대부터 시작된 GDP를 좀 더 나은 지표로 만들려는 움직임의 의의는 GDP의 성격을 드러내어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GDP의 지위는 여전히 굳건하다. 사실 ‘후생’을 측정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무엇이 ‘후생’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지를, 그것의 가격을 얼마로 매길지를 판단하는 것이 시대나 국가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은 GDP의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한정적으로 쓰는 것일 수 있다. 적어도 그것이 무엇을 측정하는지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GDP가 우리의 행복과 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시장 경제 활동의 규모와 구성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GDP가 더욱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GDP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작업과 연결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의 의미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안 지표를 제시한 그간의 흐름이 가졌던 한계를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안 지표체계는 여전히 기계론적 사고에 기반해 분절적이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많은 시도가 ‘종합상황판’ 접근을 채택했다. 지표를 추가로 도입해 GDP를 보완하고자 했으며, 경제성장이 좀 더 지속 가능해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방식은 GDP를 전면 대체하는 것보다 정치적 문제가 적다(2016[2013]: 125). 이런 시도들은 암묵적으로 GDP 성장과 부정적인 외부성이 어떤 식으로든 “탈동조화”(decoupling)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좀 더 효율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좀 더 혁신적으로 상품을 유통한다면, 경제는 환경이나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피오라몬티, 2016[2013]: 140). 그러나 이러한 탈동조화가 나타난다는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잭슨, 2013[2009]: 102-103). 잭슨은 효율성 추구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잭슨, 2013[2009]: 95). 잭슨은 탈동조화 주장이 논리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논증하는 장을 이렇게 맺는다. “자원효율성 제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과 자원처리량 감소는 모두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 분석한 결과는 탄소 배출의 ‘대폭적인’ 감축과 자원절감이 시장경제 구조에 맞서지 않고도 달성될 수 있다는 가정은 공상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116쪽)

이러한 방식의 막연한 종합의 한계는 국제 수준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리스트(2013[2007])는

새천년개발전략 등 국제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으로 제시하는 계획의 허구성을 이렇게 비판한다.

“‘발전’을 분리하여 여러 개의 단절된 목표들로 나눈 것은 실상 사고를 마비시키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관시켜 사고하는 것을 방해한다. (...) 아시아에서 빈민의 숫자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이는 오염을 증가시키고 불평등을 강화시킨 대가였다. (...)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똑같이 중요한 다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분명 하나의 기구가 경제성장과 기후 변화에 동시에 집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러 주장을 대담하게 병치시키면서 그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매우 고민스럽게 만든다.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경우 ‘발전’에 대한 믿음 전반에 의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328-329쪽)

둘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경제적 효용론의 기초가 되는 공리주의적 틀을 강화할 수도 있다. GDP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려는 대부분의 시도는 GDP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 즉 가치를 화폐화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가치를 포함하기 위해 그런 가치에 가격을 매겨야 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사고방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다. ‘자연 자원’을 측정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필링, 2019[2018]: 232-246). “생태계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자연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우리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을 가진 모든 것은 사고팔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자연 자원의 시장화가 수반하는 커다란 위험의 가능성 역시 열어젖힐 수 있다.”(피오라몬티, 2016[2013]: 144)

행복 연구도 비슷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GPI 역시 개인의 선호는 개별적으로 주어지고 행복은 그러한 선호를 만족시키는 소비의 함수라는 GDP의 일반 전제를 수용한다. 여기에는 개개인이 선호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신념도 깔려 있다(해밀턴, 2011[2003]: 46). 그에 따라 시장에 의해 만들어진 선호를 근거로 시장의 가치를 옹호하는 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¹⁵⁾

2) 경제성장이라는 신앙

앞의 두 가지 한계는 결국 이런저런 대안적 시도들이 여전히 성장 패러다임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런 시도들은 유의미한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지

¹⁵⁾ 그럼에도 행복 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 그것은 개인의 행복이 상대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해밀턴, 2011[2003]: 77; 잭슨, 2013[2009]: 78; 레이워드, 2011[2005]). 이것은 ‘관계’와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사회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는 것도, ‘의미감과 목적의식’이 만족스러운 삶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소득이나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와 의미를 파괴하는 효과를 낳는다.

못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것은 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경제성장이라는 지향점은 바뀌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다.

한 가지 답은 경제성장이 일종의 세속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시각이다.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은 사실이 아닌 믿음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에 충당할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성장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흥분과 경제성장으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보장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해밀턴, 2011[2003]: 36) 해밀턴은 현대 사회에서 소득 증대가 어떤 것의 수단인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희망과 계획을 몽땅 쏟아붓는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었다고 말한다(36쪽).

다니엘 벨(2021[1976])도 일찍이 산업사회에서 경제성장이 종교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경제성장’과 관련한 특징으로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은 선진 산업사회에서 세속적 종교가 되었다. 즉 경제성장은 개인적 동기의 원천, 정치적 연대의 토대, 공통의 목적을 위한 사회적 동원의 근거가 되었다. (...) 경제성장이 사회를 동원하기 위해 그간 이용되어온 민족주의나 여타 이데올로기의 감정적 힘이나 호소력을 가진 적은 결코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오늘날 서구 산업사회의 주요한 신조가 되었다. 만일 경제성장에 전혀 헌신하지 않는다면, 소련—또는 일본 또는 미국—은 그 무엇을 국민에게 사회적 목표로 내세울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사실은 경제성장이 하나의 ‘정치적 해결책’이었다는 것이다. 성장은 항상 기대를 상승시킨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은 또한 사회복지와 방위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준다. (...) 의회는 경제성장이 재정수입을 증가시켜주는 한, 조세구조를 개혁하거나 사회에서 세금의 비중을 늘리지 않고 뉴 프런티어(New Frontier)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하는 데 기꺼이 찬성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지적사항이다) 경제성장은 자본주의의 독특한 모순, 즉 그것의 경제적 파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모순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은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과 연결되어 있었고, 또 모든 민주적 정치경제가 비참한 정치적 결과 없이 인플레이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425-426쪽)

한국 사회 곳곳에 붙어 있던 아래의 포스터는 일종의 신앙 체계로서의 경제성장론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림 1> 한국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드러내는 광고 카피



(BC카드 광고, 2002년)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부동산 투자는 **나 디스크**

(부동산투자 플랫폼 광고, 2021년)

소득으로 행복을 말하려면 최소한 우리는 소득이 창출되는 조건과 소득이 지출되는 제반 여건을 알아야 한다. 상당 경우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과정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많기 때문이고, 상당 경우 돈을 쓰는 방식이 행복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라는 믿음 체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전혀 따지지 않는다. 그저 부자가 되라고 말한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 ‘어떻게’라는 질문은 없다.

3) 현대 화폐 시스템의 모순

물론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구를 믿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현 경제 시스템에서는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에 투입하는 요소를 활용할 때 효율성을 강조한다. 기술 발전은 효율성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효율성 증가는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이때 경제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면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업은 소득을 줄이고, 소비를 줄인다. 소비가 줄면 기업 투자도 준다. 실업률이 높으면 사회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 소득과 지출이 줄면서 세수가 감소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한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이자를 갚으려면 경제 규모가 커져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다(잭슨, 2013[2009]).

순환 고리를 유지하려면 고리의 크기를 계속해서 키워야 한다. 그 고리를 키우는 것은

부채다. 그것은 오늘날 국민경제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새로운’ 자금이 시중 은행이 소비자에게 한 대출로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 있다. 은행은 이윤을 위해 최소 조건의 제약하에서 대량으로 대출(통화 창출)을 하기 마련이다. 부채는 원금에 이자가 붙는 돈이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해줄 때 그 대출금 속에는 원금만 있지 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자를 물려면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부채는 증가하기 마련이다(김종철, 2009: 242). 이것이 반복되면 모두가 빚으로 연결된다. 이때 어느 한쪽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신규 통화(대출)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시스템은 급속하게 붕괴할 수 있다. 한 예가 2008년의 금융위기였다. 이를 막으려면 추가적인 통화(부채)가 발행되어야 한다.

문제의 근본은 통화발행권이 민간 은행에 있다는 것과 관련 있다. 많은 사람이 국가가 돈을 ‘찍어낸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는 통화발행권이 없다. 통화발행권은 은행이 갖고 있다(세키 히로노, 2011).¹⁶⁾ 금본위제에서 은행의 힘은 일정 부분 제약받았다. 보유하고 있는 금에 따라 돈을 찍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시킨 이래 각국의 통화는 달러 기축제 형태를 띤 순전한 법정통화다. 다시 말해 그것은 국민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실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인데, 이것은 은행의 편의대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 부분준비제도하에서 은행은 예금의 8~10%의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¹⁷⁾

이런 의미에서 경제의 중심은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부채 상황에 있다(케네디, 2013[2011]). 부채의 핵심은 아무도 결국 그것을 갚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모두가 부채를 상환한다면 경제활동은 정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채는 다른 이에게 떠넘겨질 뿐이며, 부채의 상환은 결국 새로운 부채로 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수입원은 조세와 국채다.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논리가 바로 경제성장이다. 국가가 조세로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웃도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국채발행도 마찬가지 논리다. 경제발전을 돕거나 경제위기를 피하는 수단으로 돈을 쓰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으로 빚을 갚는다는 논리다. 즉 “국가가 경제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은행 돈의 이익 논리에 따라 국가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세키 히로노, 2011)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조건으로 존립한다.

16) 은행이 통화발행권을 갖게 된 것은 19세기 말이다. 가내수공업 시대가 끝나고 기계제 공업 시대가 되자 설비투자 수요가 커졌다. 기업은 은행 용자로 비용을 충당했다. 국왕도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은행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상품 가격의 상당 비중이 은행 이자로 지불되는 체제가 자리 잡았다(브라운, 2009[2008]).

17) 많은 사람이 은행의 수익 구조를 잘못 알고 있다. 예금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버는 일종의 금전 중개업으로 은행이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으로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은행은 신용창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 발행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김종철, 2009: 239-240). 현대 경제의 90퍼센트 이상은 이러한 은행 돈(명목상 신용)으로 움직인다(푸세, 2021[2013]).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한국은행권’이라는 지폐와 동전은 몇 퍼센트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현대 화폐제도와 그것에 기반한 경제체제가 경제성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결국 대안 지표를 만드는 일은 사회를 바꾸는 일과 연동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사회를 조직하는 틀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¹⁸⁾

5. 얼마나 더 성장하면 될까?

사실 ‘필요’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다. 그러나 경제는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한다.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무수한 마케팅 기술이 동원된다. 대공황이 한창이었던 1930년에 케인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중을 상대로 강연했다. 강연 제목은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었다(케인즈, 2009[1931]). 그 강연에서 그는 대공황 기간이었음에도 당시의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다. 중요한 고민거리는 당장의 위기가 아닌 ‘성장’ 이후의 사회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 년 앞을, “우리의 손자들”을 내다보라고 말했다.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나는 1백년 안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해결책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는 곧, 만약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경제 문제가 인간의 영구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208쪽)

케인즈는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습관과 본능을 재조장하는 작업”(209쪽)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경제적 걱정에서 풀려난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과학과 복리가 안겨줄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우면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210-211쪽)이기도 하다.

“부의 축적이 더이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덕으로 꼽히지 않게 되면 도덕규범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2백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사이비 도덕 원칙들 중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 사이비 도덕 원칙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런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떠받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히 화폐 동기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유물로서의 돈에 대한 사랑은 본래 성격 그대로 다소 혐오스럽고 병적인 성향으로 인식될 것이다. 삶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수단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또

18) 이런 문제의식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주장하는 개혁의 방향은 화폐발행권을 온전히 정부가 가져오는 것이다(그리닝, 2010). 이 문제와 관련한 국내의 최근 논의는 나원준 외(2021)를 참조.

오늘날 우리가 자본 축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매우 혐오스럽고 불공정하게 느껴져도 눈을 감아주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관습과 경제적 관행을 폐기할 수 있는 길도 마침내 열릴 것이다.”(212-213쪽)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그때까지는 (전략적으로) “한동안은 탐욕과 고리대금과 미래 대비가 우리의 신이 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문제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경제문제에 대한 예상 때문에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구한 의미를 지니는 일들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케인즈는 호소했다.

그의 말은 반은 맞은 것 같고 반은 틀린 것 같다. 우리는 부유해졌다. 그러나 경제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케인즈는 인간의 절대 욕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강연에서 그는 인간의 욕구를 절대 욕구와 상대 욕구로 나누었다. 그러면서 1930년대는 아직 절대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지만 절대 욕구가 충족될 ‘손자 세대’에 오면 인간은 경제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술이나 학문 등 문화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시점은 서구 사회에서 1960년대 후반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계는 케인즈의 전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의 경제는 한 마디로 상대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경제가 되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싶다는 욕구를, “정말로 만족을 모르”는 욕구를 자극하는 경제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는 자본 과잉의 시대였다. 세키 히로시는 그때부터 세계는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만들고, 사치품을 만들고, 무기 따위를 만들어왔”다고, “이것이 20세기가 전쟁과 환경파괴의 세기가 된 근본 원인”이라고 말한다(세키 히로노, 2009). GDP와 행복의 관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절대 욕구를 충족하는 선에서 GDP 증가는 행복도를 높인다. 상대 욕구 단계로 들어가면 화폐 가치 상승은 경쟁 심화, 불평등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

존 스튜어트 밀(2010[1965])도 경제성장 논리는 상대 욕구를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지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필요 이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부를 대변하는 목적 이외에는 별로 즐겁지도 않은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는 재원을 곱절로 늘리는 일, 또는 수많은 개인들이 해마다 중간계급에서 더 부유한 계급으로, 또는 직업이 있는 부자에서 직업이 없는 부자로 옮겨 가는 일이 왜 축하해야 할 일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생산의 증가가 여전히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은 오로지 세계의 후진국의 경우뿐이다.”(93-94쪽)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경제성장’을 말하는가? 누구를 위해 경제성장을 말하는가? 적어도 개인의 행복 증진은 아니라는 것이 많은 연구가 내린 결론이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관료는 왜 성장을 말하는가? 정치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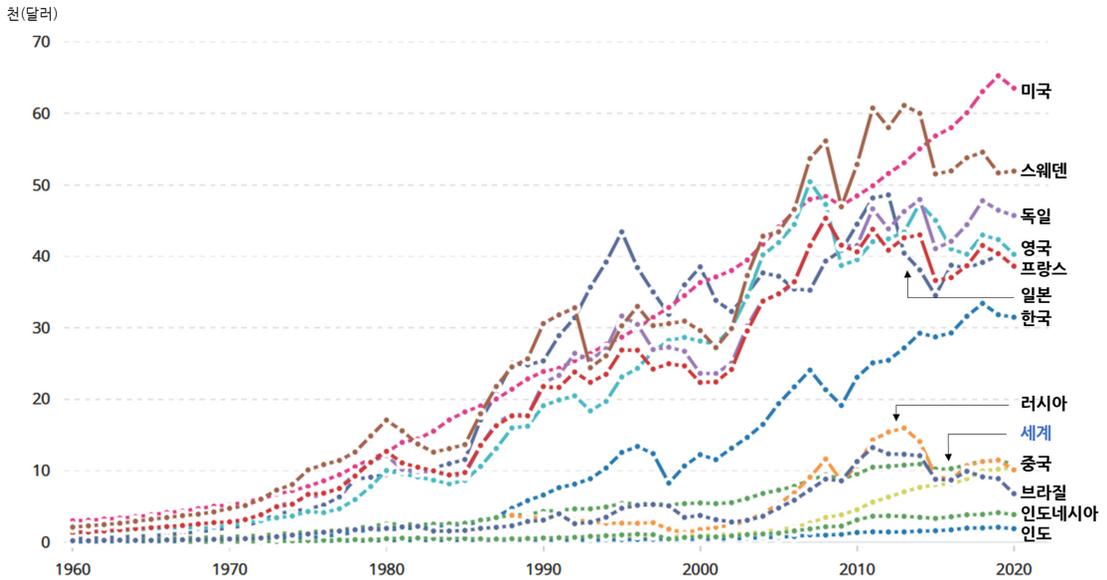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모호한 말로 실체보다는 스타일을 앞세운다. 환경운동이나 여성운동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정치 프로그램의 한 항목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여전히 성장이 최종 목표다. 성장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정언명령이다. 이런저런 형태로 어떤 수식어를 붙이든 오늘날 성장 주장은 결국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하고 싶다는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에 호소한다.

물론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성장을 멈추면 여러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연구 작업을 정리해 책으로 펴낸 팀 잭슨(2013[2009])은 우리가 성장을 전적으로 당장 거부할 수도, 성장을 계속 추구할 수도 없는 “성장의 딜레마”(158쪽)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3차원의 12가지 과제를 제안한다(221-237쪽). 핵심은 ‘지속 가능한 성장’론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론으로의 전환이다.

- ① 한계 설정하기: 자원이용 및 배출 한도 설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개혁, 개발도상국의 생태적 이행에 대한 지원
- ② 경제 모델 고치기: 생태거시경제학 개발하기, 일자리, 자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금융 및 재정 건전성 높이기, 국민계정 개선하기
- ③ 사회논리 변화시키기: 노동시간 정책, 구조적 불평등 없애기, 능력과 번영의 측정, 사회적 자본 강화하기, 소비문화 해체하기

그가 제안한 것들 중 다수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것들이다. 이런 비전은 잭슨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영국에서도 소수의견으로 남아 있다. 2011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문을 닫은 뒤로 영국 정부가 근본적인 전환을 시작했다는 조짐은 없다. 아직 배가 고픈, ‘지속가능’보다는 ‘발전’에 관심이 있는 한국사회(조해인, 2021)에서 위의 비전은 더욱 소수의견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성장하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그림 2> 세계 주요 국가의 1인당 GDP(1960-2020년)



자료: World Bank

출처: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locations=KR-1W-JP-US-GB-DE-CN-FR-SE-RU-IN-ID-BR>

세계 주요 국가의 1인당 명목 GDP 변화 추이를 나타낸 위 그림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답은 이른바 유럽 선진국의 평균 수준인 4만 달러 정도일 것 같다. 어쩌면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 거의 최고 수준인 미국의 6만 달러 정도가 답일 수도 있다. 어쩌면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의 13만 달러 정도일 수도 있다. 그런데, 13만 달러이면 될까?

이 그림을 보면 한국(인)의 조급함과 주저함의 배경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만 더 달리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옛날 방식으로 달리면 될 것 같은데, 숨이가쁘다. 유럽 선진국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기서 성장이 멈출까 하는 초조와 조금만 더 따라잡으면 된다는 안달이 공존하는 것 같다. 그런데 탄소중립이니 뭐니 하면서 비용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상황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좀 더 바짝 하면 된다고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정도 작업으로 위의 질문에 답할 수는 없다.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글로 말하고 싶은 것은 좀 더 많은 이들이 GDP에 대해, 경제성장에

대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바라는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GDP를 당장 넘어서자는 구호를 외치지 않더라도, GDP를 더 나은 통계치로 만들어보려고 제안하는 차원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GDP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바란다. ‘경제’라는 것이 외부에 있고, GDP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다. 우리가 만든 GDP라는 거울로 보는 경제를 우리는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대안 지표 작업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안 지표 작업으로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기존의 경제와 사회가, 경제와 환경이 어떠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치를 병렬한 후 쉽게 종합하기보다 여러 가치 간 긴장을 보여줘야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현대 화폐 시스템을 전환할, 성장의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구교준·최영준·이관후·이원재. 2018. “자유안전성 혁명: 행복하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LAB2050.
- 구혜란. 2015. “사회의 질: 이론과 방법.” 이재열 외. 『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한울. (pp. 19-47)
- 그리뇽, 폴(Paul Grignon). 2010.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녹색평론』 113:2-22.
- 기든스, 앤서니(Anthony Giddens). 2001[1998]. 한상진 옮김. 『제3의 길』(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생각의나무.
- 김경아·문태훈. 2019. “참발전지수(GPI)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 김미곤·여유진·정해식·박이택·김성아. 2017.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석호·권현지·김태균·박영실·이영미·정혜진·홍석철.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통계개발원.
- 김석호·송수연·조세희·정혜진. 2019.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표 정의 개선 및 산출방법론 마련 연구』. 환경부.
- 김석호·이재열·구혜란·양종민·정혜진·모영규·이상직·정인관·김미영·임동균·송진미·이상운·김명수. 2021. 『국가사회 발전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체계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용하·윤강재·김계연. 2009. 『OECD 국가 행복(well-being)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인수. 2015.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50년사, 1965—2015』. 한울.
- 김정현. 2021. “책을 내면서.” 『녹색평론』 180:2-3.
- 김종철. 2019.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녹색평론사.
- 김종호·강상인·최선미·서은주·이현지. 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판석·사득환. 1999.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 정립.” 『한국정치학회보』 32(4):71-88.
- 김현곤. 2021.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국가미래전략Insight』 20:1-22.
- 나원준·민병길·박원익·신희영·안현효·유승경·이정구·조복현·황재홍. 2021. 『MMT 논쟁』. 진인진.
- 다스웨이트, 리처드(Richard Douthwaite)·이머 오슈크루(Emer O’Siochru). 2021.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의 과제.” 『녹색평론』 178:27-43.
- 러미스, C. 더글러스(C. Douglas Lummis). 2002[2000]. 김종철·이반 옮김.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經濟成長がなければ私たちは豊かになれないのだろうか). 녹색평론사.
- 레이, L. 랜덜. 2017[2015]. 홍기빈 옮김.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y Theory). 책담.
- 레이워드, 리처드(Richard Layard). 2011[2005]. 정은아 옮김. 『행복의 함정: 가질수록 왜 행복은 줄어들는가』(Happiness). 북하이브.
- 리스트, 질베르(Gilbert Rist). 2013[2007]. 신해경 옮김.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책.
- 민보경·변미리·임병호·하민지. 2020a.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민보경·이채정·허종호·김영재·배광빈. 2020b.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밀, 존 스튜어트(John Stuart Mill). 2010[1848]. 박동천 옮김. 『정치경제학 원리』(제4권). 나남.
- 박명호·이재열·전홍택·이영섭·오완근·장덕진·장용석·한상범. 2009.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I): 경제 사회발전지표의 개발 및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벨, 다니엘(Daniel Bell). 2021[1976]. 박형신 옮김.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한길사.
- 변미리·민보경·박민진. 2017.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서울연구원.
- 브라운, 엘렌 호지슨(Ellen Hodgson Brown). 2009[2008]. 이재황 옮김. 『달러: 사악한 화폐의 탄생과 금융 몰락의 진실』(The Web of Debt). 이큰아침.

- 세키 히로노(關曠野). 2009. “삶을 위한 경제: 왜 기본소득 보장과 신용의 사회화가 필요한가.” 『녹색평론』108
- _____. 2011. “근대 조세국가의 위기와 기본소득.” 『녹색평론』116:82-96.
- 스티글리츠, 조지프(Joseph E. Stiglitz). 2013[2012].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The Price Of Inequality). 열린책들.
- 스티글리츠, 조지프(Joseph E. Stiglitz)·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장 폴 피투시(Jean-Paul Fitoussi). 2011[2010]. 박형준 옮김. 『GDP는 틀렸다: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Mismeasuring Our Lives: Why GDP Doesn't Add Up). 동녘.
- 얼, 조(Joe Earle)·카할 모런(Cahal Moran)·제크 워드 퍼킨스(Zach Ward-Perkins). 2019[2000]. 안철홍 옮김. 『이코노크러시: 경제를 전문가에게만 맡겨놓는 것의 위험성』(The Econocracy: The Perils of Leaving Economics to the Experts). 페이퍼로드.
- 에스테바, 구스타보(Gustavo Esteva). 2010[1992]. “발전: 두 개로 나뉜 세계.” 볼프강 작스 외. 『反자본 발전 사전』(The Development Dictionary). 아카이브. (pp.33-70)
- 이마무라 히토시(今村仁司). 1999[1996]. 이수정 옮김. 『근대성의 구조』. 민음사.
- 이상대·정유선·송승현·박양호. 2014. 『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승주·최영준·이원재·고동현. 2020. “GDP를 넘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시대,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LAB2050.
- 이승준·김지원·조주령·구교준. 2021. “대안 GDP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도시·국가·국제기구의 사례분석.” LAB2050.
- 이재열. 2015. “사회의 질 연구와 한국 사회 발전.” 이재열 외. 『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한울. (pp.321-365)
- 이재열·구혜란·남은영·정해식·안상훈·정병은·김주현·정민수·조병희·정진성. 2015. 『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한울.
- 이채정·박기태·구교준·이희철·송은주·김지원·박차늬. 2019a. 『한국인의 행복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이채정·정혜진·김지원·유종성. 2020.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이채정·허종호·민보경·서은국·한준·이화령·최민영·홍민성. 2019b.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이홍균. 2000.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 열린 체계와 닫힌 체계.” 『한국사회학』 34(WIN):807-831
- 임현진. 1998. 『한국인의 삶의 질』.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석준. 2011. 『신자유주의의 탄생: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책세상.
- 잭슨, 팀(Tim Jackson). 2013[2009]. 전광철 옮김. 『성장 없는 번영: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를 위한 생태거시경제학의 탄생』(Prosperity without Growth). 착한책가게.
- 전홍택·박명호·이재열·강성진·김동욱·주형환·김이영·안상훈. 2009.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I):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진성·박경숙·이재열·장덕진·장상철·고형면·장진호·이원재·안정옥. 2010. 『사회의 질 동향 2009』. 한울.
- 정해식·김성아. 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227:75-88.
- 조병구·이명균·이용수·김옥·박명호·김석호·박찬열·김지영·민인식.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조해인. 2021. “한국의 미래 SDGs 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분절에서 통합으로.” 『Futures Brief』 2:1-19.
- 케네디, 마르그리트(Margrit Kennedy). 2013[2011]. 황윤희 옮김. 『화폐를 점령하라: 99%의 화폐는 왜 그들만 가져가는가』(Occupy Money: Damit wir zukunftig ALLE die Gewinner sind). 생각의길.
- 케인즈, 존 메이너드(John Maynard Keynes). 2009[1931]. 정명진 옮김. 『설득의 경제학』(Essays in Persuasion). 부글북스.
- 코일, 다이앤(Diane Coyle). 2018[2014]. 김홍식 옮김. 『GDP 사용설명서: 번영과 몰락의 성적표』(GDP: A Brief but Affectionate History). 부키.
- 클라크, 서스톤(Clarke, Thurston). 2020[2008]. 박상현 옮김. 『라스트 캠페인: 미국을 완전히 바꿀 뻔한 83일간의 대통령 선거운동』(The Last Campaign: Robert F. Kennedy and 82 Days That Inspired America). 모던아카이브.

- 폴라니, 칼(Karl Polanyi). 2009[1944].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길.
- 푸셰, 제라르(Gérard Foucher). 2021[2013]. 서익진·김준강 옮김. 『화폐의 비밀: 화폐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Les secrets de la monnaie, Changer la monnaie pour changer le monde). 길.
- 피오라몬티, 로렌조(Lorenzo Fioramonti). 2016[2013]. 김현우 옮김. 『GDP의 정치학: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숫자』(Gross Domestic Problem: The Politics Behind the World's Most Powerful). 후마니타스.
- 필링, 데이비드(David Pilling). 2019[2018]. 조진서 옮김. 『만들어진 성장』(The Growth Delusion). 이콘.
- 황명진·심수진. 2007. 『행복지수의 개발: 지표체계 구성안』. 통계개발원.
- 황혜신·이환성. 2020. 『포용국가를 위한 BLI(Better Life Index) 성과관리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하비, 데이비드(David Harvey). 2007[2005].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한울.
- 한국은행. 202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 한상진. 2018. 『한국형 제3의 길을 통한 생태복지국가의 탐색』. 한국문화사.
- 해밀턴, 클라이브(Clive Hamilton). 2011[2003]. 김홍식 옮김. 『성장숭배: 우리는 왜 경제성장의 노예가 되었는가』(Growth Fetish). 바오출판사.
- 허종호·민보경·이채정. 2020.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예비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 헬라이너, 에릭(Eric Helleiner). 2010[1996]. 정재환 옮김. 『누가 금융 세계화를 만들었나: 국가와 세계 금융의 정치경제』(States and the Reemergence of Global Finance: From Bretton Woods to the 1990s). 후마니타스.
- 홍기빈. 2021. “도넛 경제학: 경제성장의 신화를 넘어서.” 『녹색평론』 178:17-26.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2. “Aspirations for our nation: a conversation with Australians about progress.” https://base.socioeco.org/docs/measures_of_australia_s_progress_consultation_report.pdf (접속일: 2021년 9월 15일)

- Beck, W., Laurent J. G. van der Maesen, F. Thomese and A. Walker. 2001.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Kluwer Law International.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edited by P. David and M. Reder. Academic Press.
- Hirsch, Fred. 1976. *Social Limits to Growth*. Harvard University Press.

부표 1 국내외 대안 지표·지수 모색 흐름

	지표/지수	개발주체	개발연도
국제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 제임스 토빈(James Tobin)	1972
	물질적 삶의 질 지수(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PQLI)	해외개발협의회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1977
	총수입계정체계(Total Incomes System of Accounts, TISA)	로버트 아이스너(Robert Eisner)	1985
	국제인간고통지수(International Human Suffering Index, PQLI)	인구위기위원회(Population Crisis Committee)	1987
	지속가능한 경제 후생 지수(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ISEW)	허먼 데일리(Herman Daly), 존 코브(John B. Cobb)	1989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UN	1990
	참진보지수(Genuine Progress Index, GPI)	진보재정의연구소(Redefining Progress)	1995
	기본역량지수(Basic Capabilities Index, BCI)	소셜워치(Social Watch)	2000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매티스 웨커네이겔(Mathis Wackernagel)	2003
	지구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 NEF)	2006
	번영 지수(Prosperity Index)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	2007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	OECD	2011
세계행복지수(World Happiness Report)	UN	2012	
해외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	부탄	1972
	삶의 질 지수(Life Situation Index, LSI)	네덜란드	1974
	진보를 측정한다(Measuring Australia's Progress)	호주	2002
	녹색GDP	중국	2004
	안녕 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캐나다	2006
	국가 웰빙 측정 프로그램(Measuring National Well-Being, MNW)	영국	2011
국내	한국사회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국가사회발전지표(지속가능금융발전지표, 통합사회지표, 녹색성장지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10
	삶의 질 지표	통계청	2014
	한국형 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환경부	2016
	행복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미래지표체계/행복지수	국회미래연구원	2020
	국가사회발전 지수체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참성장지표	LAB2050	2021

Futures Brief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2021.7.29
2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분절에서 통합으로	조해인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8.26
3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9.30

· 이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www.nafi.re.kr (미래연구-미래보고서-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